

##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현실

[ No. 4 ]

일시: 2010년 12월 2일(목)

연사: 마이클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 전 미국 주일대사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많은 옛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쁜 일입니다. 동경에서 같이 일했고 늘 존경하는 공로명 대사님을 또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종연구소의 국가전략 조찬포럼에 연사로 초대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말에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되는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은 첫째로 우리 양국관계의 격상된 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눈에 띄게 돈독해진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 뿐 만 아니라 견고한 양국정부의 동맹이 글로벌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한미 FTA도 잘 마무리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우리 미국정부도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이 한미 FTA의 체결을 위해 용기를 발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둘째로, 이 지역 국가들이 지구촌 경제침체에서 탄력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겨우 흉내를 내는 정도입니다. 일본도 비교적으로 느린 편인데 한국과 대만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침착하게 회복을 계속하고 있고 지역 무역에도 크게 활기를 주었습니다.

셋째로 대만해협이 지금보다 더 평온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만정부의 정치적 시각의 변화 때문이며 분단의 현실을 합법적 독립으로 생각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본토 중국과의 접촉을 확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금주에 있었던 대만의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그런 기조가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되리라 봅니다.

넷째로,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도 금년 봄부터 부드러워 졌습니다. 당분간 푸덴마 기지이전문제로 어려움은 없을 것이며 9월초 센카꾸 열도 분쟁문제를 계기로 일본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방위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문제이며 다음은 최근 중국의 오만한 태도이고 일본의 대외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오바마 행정부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 북한

나는 평소에 북한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은 없습니다. 나는 북한을 기능장애 국가라고 생각하며 그 지도자들은 교활하고 음흉하지만 자살 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양의 허세는 약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외교 수법은 조잡하고 터무니없는 속셈이 드러다 보입니다. 자극적으로 위기를 조성한 후 일시적으로 자제하면서 돈이나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수법에 능숙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모험주의적인 만행의 뒤처리에서 북한을 외교적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미 양국 정부는 그런 게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북한이 지금 우리 군인과 민간인들에게 “전쟁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그의 뚱뚱한 할아버지를 비슷하게 닮은 것 외에는 고위직을 감당할만한 자격이 없는 김정일의 아들 젊은 풋내기의 신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짓거리라고 하지만 그런 뚱은 죽사발과 같은 어린애를 놓고 개인숭배 형 권력을 창출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치적인 점수를 얻기 위한 그와 같은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그 나쁜 버릇을 키워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이 우리의 대북전략을 재고해야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때 진지한 추진계획도 없으면서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공허한 희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한 남한과 중국과 협력을 했어야 했는데 요는 중국이 절대로 우리와 같이 그런 게임에 동조하지 안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핵문제를 “매수”하겠다는 식의 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의구도나 6자회담을 통해서도 북한의 거센 핵 야욕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구도가 전혀 허사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로인해서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8년 동안 억제했는데 이제 와서는 우리가 의심했던바와 같이 북한은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라늄 농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최근 이와 같은 북한의 뻔뻔한 행위를 판단해볼 때 우리의 “억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시다. “과연 김정일과 그의 후계자는 그 미성숙한 핵시설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 포함)을 믿고 동맹국인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거나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의 보복을 고려하지 않고 남한에게 제한적인 재래식 무력행위를 감행할 자신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한반도 전면전의 위험지수가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합니다. 6자회담은 거의 7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7년간의 협상 도중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두 차례 핵실험을 했고 은밀히 건축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혹자는 더 강력한 제재를 주장합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특히 재정적인 압박은 북한의 내부사정과 국제 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젖줄이 되어있는 한 제재의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또 누구는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 자신이 이미 고립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을 강요하지만 개혁은 개방을 전제로 합니다. 개방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외부의 정보와 아이디어에 인민들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인민들을 폐쇄의 울안에 가두어두고 있습니다. 나는 국민대학교 교수 안드레이 란코 (Andrei Lanko)의 주장, 즉 교류확대를 통하여 북한사람들이 더 많이 외부세계의 사정을 알게 하자는데 매력을 느낍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북한의 화려한 선전선동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정권의 권위와 합법성을 부인하는데 인민들이 각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기전의 하나입니다. 당장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는 주장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현명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재고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은 북한이 과거보다 더 무모한 도발을 자행 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을 때 우리의 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있어야 합니다.

\*워싱턴의 정가에서는 북한이 자제하도록 중국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보다 북한의 붕괴를 더 염려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양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고집합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북한에게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권유지를 협조하며, 3대 세습을 비호하며, 대남도발행위도 묵인합니다. 중국을 설득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동맹국인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대하여 무관심한 중국이 정치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중국에게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방어와 억제력을 제고하는데 집중해야하며, 우리의 <레드 라인>(Red Line)이 무엇이며, 그들의 도전에 우리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오래 기다렸던 서해상의 한미합동 훈련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중국이 평양의 코흘리개 “젊은 대장”에게 어른다운 간섭을 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이와 같은 서해상의 한미합동훈련을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란 것을 중국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 우리의 준비태세를 재점검하고 교전수칙을 재정비하여 최근에 있었던 것과 같은 북한의 도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나는 군사전문가가 아닙니다. 나의 주변에는 훌륭한 군사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확실합니다. 만약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또다시 자행한다면 한국 또는 미국의 심각한 응징이 뒤따를 것 입니다. 요는, 북한이 살아남기 원한다면 이제 더 고민을 해야 합니다.

## ■ 중국의 오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부상은 전 세계의 목격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등소평의 <도광양회>(韬光養晦) 교훈을 신중하게 따랐습니다.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며 경제발전에 진력하라”는 뜻입니다 (conceal capabilities, bide time, and concentrate on economic growth).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저자세를 취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적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약소국의 <고전적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이 어려운 국내문제를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느꼈을 때 아주 적절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아래와 같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정부를 우롱했습니다. 중국은 UN의 결의를 방해하고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중국은 동남 지나 해역을 중국의 핵심 국익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황해 전체를 중국의 <배타적 경제구역>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이 지역에서의 미 해군작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국방예산을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에 가깝게 확대 했습니다.

\*중국은 <대양해군>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주산업과 사이버 (cyber) 능력배양을 위해 놀랍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하여 위협적인 경제제재를 협박했고 센카꾸 열도에 대하여 골목대장 전술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중국정책의 의도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해석이 주도적이며 그 내용들은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중국은 이미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약소국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정위기나 그 후과는 <방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주효했다. 그 결과로 짧은 기간 내에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그리고 시장주도의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약점과 모순에 비해 자기들의 국가자본주의에 더 정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라면 지구촌 힘의 균형이 확실히 자기들 편으로 쏠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 쪽이 더욱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근육을 과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두 번째 가설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수뇌부는 편협하고 촌스러워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을 주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인접해역을 통제하는 일이나 열심이며 당이나 국가지도자들은 과거 등소평만큼 군부의 신망이 없고 또는 점진적으로 쌓아올린 강택민만큼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 통제에 취약하다.

\*세 번째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인민들을 세계화추세에 그리고 강력한 민족감정의 표현과 공유를 부추기는 정보기술에 노출시켰으며 국가지도자들은 이런 현상을 대외정책 수립과 이행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해석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중국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런 일들이 중국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까지 키워온 국력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무시할 수없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중국의 국방예산은 미국의 1/8 밖에 안 되며 미국은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중국부근에서 작전을 할 수 있고 중국도 우리 지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일차적인 도전은 국내문제 해결이어야 합니다. 중국은 방대한 나라이고 나라가 합심해서 국경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거대한 국가입니다. 지금 정의하는 국가정책은 향후 최소한 10년 내지는 2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전성시대와는 달리 중국은 지금 거드름부리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의 핵보유국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세련된 경제 강국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월남이 호락호락 하거나 만만한 나라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역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이 황해에 접근하면 중국의 수평선 너머에서 위용을 드러냅니다. 만일 중국이 이웃나라들의 이해를 침범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경종이 요란스럽게 울릴 것입니다. 참으로, 최근에 한반도와 동남 지나해 분쟁에서 보여준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있어야할 선구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질서에서 힘의 균형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정책은 우리의 4천년 역사를 유지해온 숙달된 지혜입니다.

## ■ 해양 분쟁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동북아 모든 나라들이, 아마 러시아는 제외하고, 대단히 연료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해저에 매장되어있는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영유권을 위요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해군을 증강하면서 그런 주장에 더욱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유권을 호락호락하게 포기한 실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 분쟁이 잠잠하다가도 어느 한 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 합니다. 상대국과 양자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입장이 불리하면 다자협상을 통해서 남의 힘을 이용한 해결을 모색하는데 최근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한 것도 그 한 실례입니다. 나는 최근의 중일분쟁의 결과를 잠동사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문제를 절도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일본이 모래위에 줄을 긋고 지워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로인하여 <간> 정부는 국내에서 그 대가를 치렀고 해외에서도 별로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무자비한 압박전술은 지역과 지역 밖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화평굴기>(和平崛起-Peaceful Rise) 독트린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자기방식만을 내세우는 강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힘겨루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그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본정부는 향후 국방예산 증액의 압력과 미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방위협력을 제고해야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 ■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외정책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외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2009년 8월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일본의 대외정책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는 당분간 유보 되었으나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최근에 있었던 오키나와 선거결과를 보면 푸덴마 기지이전문제 해결이 얼마나 힘들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심하게 멍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대외정책 수립과정도 변덕스럽고 불안정합니다. 외교관들은 비전문가들이고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들도 정책지침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도 기발한 외교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난해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쪽에 기우러졌다가 다음에는 이쪽에 기우러졌다가 아직도 정책우선순위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센카꾸 열도 분쟁이 외교정책의 현실을 일깨워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일본이 의지할 수 있는 동맹국과 우방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2년

이젠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정치는 지난 중간선거에서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시아를 방문한 후 국내에서는 별로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오는 정월에 의회가 소집되면 워싱턴의 권력은 양당이 겨루게 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에 외교정책에 더 힘을 써야할 것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행사를 작심할 수 있다는 경종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난 2년 동안에도 그랬지만 그는 아시아 정책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최근에 수출을 통한 고용증대를 선언한 것도 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아시아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곳이고 또한 미국이 적지를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에 험악해졌고 북한의 도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방위협력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미국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변수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무리한 군사작전을 했고 이제 우리의 관심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능력도 우리가 이 지역에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익에 주효하다고 느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아시아에서 강력하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범태평양 동반자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에이펙(APEC)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FTA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을 나는 희망합니다.

내가 믿기에 아직도 해법이 없는 부분은 미국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 일부는 확실히 중국이 잠재적 적대국이라고 간주하며, 일부 소수는 유망한 지구촌 파트너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만 거센 경제적 경쟁국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의견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은 미국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는 커다란 경종입니다.

내가 1950년대에 학교에 다닐 때 기억이 나는데 하루아침에 소련이 스푸트니크(Sputnik)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소련은 앞으로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최고

의 산업 및 군사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협력하여 국내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했고 <국방교육>(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법안을 통과시켰고 대학교 교육을 활성화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고속도로>(National Highways Act)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특히 컴퓨터 우주산업 그리고 원격통신 분야에, 투자를 늘렸고 그 덕으로 20세기 내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산업과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우리의 문을 두들기고 만만치 않게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이나 1980년대 일본이 접근해온 것 보다 무섭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더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쌓아올린 우리들의 의무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국내문제 해결에도 힘써야 합니다. 수준미달의 학교제도를 너무 오래 방관했습니다. 국가부채도 힘들 정도로 싸였습니다. 이민정책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많은 주정부의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정치적 역기능 현상을 관대히 대해왔습니다. 이처럼 축적되어온 문제들을 쉽게 퇴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토록 견딜 수 없고 애걸을 해도 풀리지 않을 국내문제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잘못되리라는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라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게 접수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쟁도전장을 제시 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겨낼 수 없는 도전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미국인들이 정한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결연하게 단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느냐 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그에 대하여 확고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내가 믿기는 미국의 양당정치구도 하에서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정당생명을 위하여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단순히 그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향후의 관리가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시아 동맹국들과 우방들이 오랫동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나의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 ■ 질문과 대답

질문 1)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나 한국에 있는 친북좌파들의 입장은 미국이 아프간과 중동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확산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개입하지 못한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사람들도 한미관계가 돈독함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이런 도발(provocation) 보다는 침범(aggression)을 자행한다면 미국은 그런 경우에 한미 관계를 중시해서 즉각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정치적 결심이 현 상황에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 1) 내 생각에 미국과 한국은 비교가 안될 만큼 북한과 동맹국인 중국보다 강합니다.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50배이며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부분 만해도 북한의 1년 국방예산과 비등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확전이 되더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말해서 국지전대응과 전면전의 선택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이 확산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다양한 대응방안과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말 했지만, 중국은 국경지대의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의 대응이 없다고 하면 중국은 현재의 편안한 자세를 고수할 것이지만 북한의 만행이 그들의 목전에서 전쟁으로 확대되면 북한을 만류하는데 나설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북한의 저돌적인 도발행위에 대하여 별 부담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 2) 강일구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남쪽에 김정일 추종세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나

라가 존속하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김정일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제거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으니 남한도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도 중국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북한과 대결하려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이나 핵 측면에서 남한은 상당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정일을 제거하고 한국이 핵을 가지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2) 많은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다 대답하려면 한 이틀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인상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누구의 소행이나를 놓고 국민들 사이에 의견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영토에 포격하여 민간인 까지 살해한 행위에 대해선 국민반응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좌경신문에서 까지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각각 다른 모양으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한국 국민들이 더욱 강력한 정치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핵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해답은, 비확산 문제, 주변국들의 핵무장여부 문제, 미국정부의 비확산 노력 등, 관련국들의 전략적 문제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늙어서 그런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 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이란의 핵보유 노력을 저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우선목표입니다. 우리정부가 그토록 애쓰는 이유는 만약 북한이나 이란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면 그 지역에서의 핵확산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만과 일본은 북한보다 월등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지할 구실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를 모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강력한 핵능력을 추구할 것입니다.

중동에서도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터키 까지 확산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핵보유국의 위험성 이상으로 광범위한 전략적 혼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핵보유국의 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전략적 계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의도, 미국과의 협상전략, 남한의 핵보유타당성여부, 1991년 남북비핵화합의(북한은 그것을 무시하고 위반했지만)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답이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한국정부와 우리정부와 일본정부가 협력해서 다뤄야 할 문제이고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전에 비해 이런 문제를 우리와 같이 협력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별로 성공적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합니다.

질문 3) 해병대 예비역 소장 김용운 입니다. 남한의 핵보유에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한 서해안 한미연합훈련으로 중국이 상당히 신경을 쓰게 만들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가졌으므로 남한이 핵을 보유하고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될 때 중국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북한은 지난 7년 동안 6자 회담을 하면서도 핵을 가져 세력이 커지면서 도발 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평도 폭격 같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핵보유를 통해 타격 능력을 갖출 때 적도 도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번 연평도 폭격 사건 이후, 정전협정과 관계가 있지만, 한미연합사령부 또는 유엔군차원에서 적극 대응했어야 합니다. 물론 첫째 한국군 수뇌부에서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도 문제지만 한미연합사, 유엔사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3) 지난주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준비태세와 교전수칙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나는 우리의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군사능력에 약점이 있었는지 살펴 봐야하고 있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평도에 배치된 군인들의 준비태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8시간 전에 분명한 징후가 있었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력의 부족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그랬는데 하고 심각하게 여기지 안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교전수칙은 기본적으로 확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행동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전수칙이나 준비태세 이전에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대응자세가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차후에 북한의 도발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와 같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언을 환영합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레드라인>(Red Line)에 대해서도 확실히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미성숙한 핵을 사용한다던지 세계 테러집단에 유출한다던지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아무에게나 돈만주면 팔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미국은 그에 대한 확실한 <레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주저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만일 남한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고 하면 북한은 그들의 핵보유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남한 배치를 거부할 구실을 찾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또다시 북방한계선에서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레드라인>을 확실히 해놓고 북한이 그 선을 넘으면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 여러분의 응징결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은 차후에 조심을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능력과 의지를 지원할 결의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4)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유석렬 입니다. 요즘에 북한급변 혹은 붕괴 조짐이 많이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이미 많은 영향력을 침투시키고 있는 중국이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에 보면 중국은 한국주도의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희망적 이야기도 있지만 중국의 배타적 지배가 통일을 멀어지게 할까 우려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답 4)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휴전 이후 반세기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한국이 이룩한 성공과 축적한 국력과 민주화 제도와 가치관 모두가 남한주도의 통일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남한이 통일의 방식과 전략을 주도할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950년과 같은 북한의 남침이 재발하여 무력통일하지 않도록 남한을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방식에서는 남한의 가치와 제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전략을 깊이 구상해보지 않았 습니다. 통일의 구상은 한국이하고 우리는 한국의 안보를 협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적절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5) 첫째, 대사님께서서는 미국의 국력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입니까? 둘째,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이 전략적동반자관계에서 일본, 한국, 호주, 아세안, 그리고 인도를 둘러리로 하는 견제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산만한 방위선은 아닙니까? 미국의 대외정책이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 5) 나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방편으로 중국에게 시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무역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국과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말은 안 하지만, 중국이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기술(know how) 제공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대적 입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수 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피차에 유익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변에 군사기지와 병력을 배치하여 미국과 우방국들의 국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자기네 국익을 챙기는 일에는 같은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것을 봉쇄전략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난 1-2년 동안 미국인들 중에는 중국을

G2 운운하며 미국의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내가 한때 국가안보회의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같이 일했던 <브레진스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G2 개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중국은 자국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력을 국제사회를 위하여 이바지하거나 책임을 느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담 때에도 중국은 국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다만 홍콩을 <조세피난처>(tax haven)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애를 썼을 뿐입니다. 지난번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때나 도하 무역협상회의 때에도 중국은 주로 자국방어에만 노력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나 무역자유화를 위한 방안에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나라들에 전가했습니다. 놀라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문제에 책임을 느낄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그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과 일본처럼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느끼는 성실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우대한다고 하면 우리의 오랜 우방들이 섭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중국을 <수퍼파우어> 상대국으로 대우할 이유가 없고 국제사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파트너 자격이 없습니다. 봉쇄정책이냐고 하는 문제에서도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우리의 국익은 보호할 것입니다. 현실점에서 장기간의 봉쇄정책을 구상한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처신에 대해 보여준 반응은 존경할만합니다. 중국의 외교행각은 다른 나라들이 합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질문 6) CS뉴스프레스 김창기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지금 UN은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같은 도발행위와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 그리고 연평도 포격행위와 같은 만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첫째 질문은, UN은 이런 현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국제 안보문제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 5개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을 계속 존중해야하는가 아니면 차기 개혁단계에서 박탈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답 6) 동서냉전이 끝날 무렵에 UN 안보리가 과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대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생각에 안보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대표기구가 아닙니다. 차라리 G20이 중국, 인도,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들을 더 대변하는, 지구촌질서의 패턴을 모색하는 대표기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G20구도 안에서 아시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초점은 거시경제에 집중되어있고 안보문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북한문제에 있어서 효과적인 외교능력발휘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중에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지만 모두 한국과 대단히 관련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때 중국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문제해결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류도 공급해주고 도발행위 같은 일은 삼가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전선에 중국의 참여는 물 건너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설득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 문제는 UN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UN의 구조개편을 두 가지 면에서 고려한바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상임이사국의 수를 추가하는 문제였고 다른 면에서는 안보리가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동의 표를 얻을 수가 없었고 현장을 고치는 일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나는 안보리가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에 안보리개편문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개편을 찬성합니다. 내가 공로명 대사님과 같이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일본정부의 주요목표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안보리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문제를 고심해 보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속히 성사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질문 7) 열린북한방송 대표 하태경입니다. 나의 질문은 북한의 핵무기에 관한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플

루토늄 탄과 우라늄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인도처럼 핵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미국은 앞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둘째, 인정할 수 없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 언제 얼마나 빨리 그 것이 가능합니까?

답 7) 그래요, 첫째, 나는 북한이 이미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평화적 목적으로 경제용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고 다행한 것은 그 규모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완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격을 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방법이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기 힘들습니다. 북한은 핵능력보유를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적 방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지난 60년 동안에 북한이 이룩한 유일한 힘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군부에서는 이미 재래식 전투력과 남한의 수도에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는 그보다 월등한 억제력을 갖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은 핵능력을 남한과의 국력차이를 메우는 형평장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큰소리 칠만한 것이 있다고 자만할지 모르나 남한과 견줄만한 으뜸 패는 못됩니다. 물론 그동안 북한은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흥정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을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정권교체 없이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한국의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단결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의문이고 미국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피력한대로 우리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정부의 비확산전략을 포기하는 것이 되며 특히 동북아시아와 중동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핵보유국의 수가 증가하면 제압하기 힘든 비 국가집단들에게 까지 확산될 위험부담이 커집니다. 그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살상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자살특공대가 됩니다. 그들의 전술은 국경의 개념이 없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고 우리가 그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미국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수용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그 유일한 방법은 아마 북한의 정권교체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이 남한과 일본과 미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익에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에서도 일부소수의 국민들이 남한의 핵보유를 거론하고 있으나 북한을 제압하는 쪽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들을 설득하는데 충분한 외교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본 요약문은 연사의 의견을 요약한 것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Realit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Northeast Asia

December 2, 2010

Sapphire Ballroom, 3F, Lotte Hotel, Seoul

**Michael Armacost**

*Former US Ambassador to Japan*



It's always a pleasure to have an excuse to revisit Korea and to see so many old friends. I really enjoy the reacquaintance with Ambassador Kong who was a colleague in Tokyo and whose career was long admired. It's an honor to be invited to speak to the Sejong Institute National Strategy Breakfast Forum.

I was asked to speak a few remarks about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I'm happy to do so. This is a kind of

good news and bad news story. So I will begin with what I regard as the good news. First, I think perhaps the best news is the high quality of our own bilateral relationship. Not only is there very evident visible rapport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Lee but also there is enthusiasm in both governments for transforming a solid bilateral alliance into wider global partnership. Clearly we need to do a little more work to complete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us. And for my part I hope my own government will demonstrate a bit more courage in completing a negotiation which is important strategically as it is economically.

Second, I think the region has displayed a very resilient rebound in aftermath of global economic downturn. Our own recovery has been only a mimic. Japan has been relatively slow but South Korea, Taiwan, and China have had very bland recoveries and that has promoted very strong rebound into regional trade.

Third, I don't remember the time when conditions in the Taiwan Straits were more tranquil. It seems to me there are varieties of reasons for this. This is mainly due to internal political changes in Taiwan which have focused the Taiwanese government on expanding contacts with the mainland rather than stealth moves to translate de facto separation into de jure independence. Given the outcome of the elections in Taiwan this week, this mood will more likely continue at least a few more years.

Forth, tensions in our relationship with Japan have eased since last spring. This is intended to push the Futenma base issue off the front burner at least for a while and the maritime incident in the Senkaku in early September certainly reminded the Japanese of the enduring utility of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S. So there are, all heartening bits of news notwithstanding, some other developments that are more worrisome. First, let me say just a few words about North Korea and a

few words about recent assertiveness of China, then brief comment on foreign policy of Japan, and finally about the Obama administration in the wake of our mid-term elections.

## ■ North Korea

I normally don't lose a lot of sleep worrying about North Korea. I regard it as a fundamentally dysfunctional country whose leaders are cunning and crafty, but scarcely suicidal. Pyongyang's bravado cannot conceal its vulnerabilities. Its diplomacy is a crude form of extortion. The tendency to stimulate crises, and then to offer a suspension of provocative conduct in return for hard cash or other concessions is familiar. So is China's disposition to shield Pyongyang from the consequences, diplomatic or otherwise, of its misadventures. Happily, however, our two governments are onto this game. North Korea has now engaged in what one can only characterize as "acts of war" against South Korean military personnel and civilians. Many attribute this to an effort to build a mythic reputation for Kim Jong-il's son, a callow youth without any evident credentials for high command other than a vague resemblance to his corpulent grandfather. It is difficult to build a new "cult of personality" out of such thin gruel. I hope we are not inadvertently helping him to construct a resume by failing to respond to the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for which he is harvesting political credit in North Korea. Now is high time to reflect on some aspects of our own strategy toward North Korea. We here speak about American strategy.

■ We once invested vain hopes in "regime change" in Pyongyang without having a serious plan for promoting it. At a minimum such a plan would have required Chinese collaboration, but Beijing was never willing to play that game, certainly not with us.

■ We have repeatedly seen hopes for "buying out" the North's nuclear activities dashed. Neither the Agreed Framework nor the Six Party Talks deflected North Korea from its relentless drive for nuclear capabilities. though the Agreed Framework did put a cap on the North's plutonium program for eight years. This is not to say that the Agreed Framework was not useful. It put a cap on plutonium program for eight years but we now know as we once suspected that they were violating the spirit of that agreement by energetically pursuing uranium enrichment as an alternative way of securing those weapons.

■ Unfortunately, judging from the brazen conduct of North Korea recently, our deterrence seems to be weakened. One has to ask the question, "Do Kim Jong Il and his anointed successor presume that a nascent nuclear arsenal (plus shiny nuclear enrichment plant in Yeongbyeon) permits them to undertake limited conventional military actions against the South without risking serious reactions from their ally in Beijing or consequential retaliation from South Korea and it ally, the United States?" If that is the case, the danger of a larger conflict on the peninsula has just gone up.

What is to be done?

■ China urges a swift resumption of the Six Party Talks. Those talks commenced nearly seven years ago. At the time North Korea had no nuclear weapons. During the seven years of intermittent negotiations, they have tested long-range missiles, they have tested nuclear device on two occasions, and they have unveiled a surreptitiously constructed uranium enrichment facility.

■ Others urge stiffer sanctions. I am not opposed to sanctions; I believe that financial measures, in particular, have genuinely complicated North Korea's life and their international activities as well. But, so long as China remains Pyongyang's supplier of last resort, sanctions can have only a limited impact.

■ Some urge further efforts to isolate North Korea. I think, in a way, isolating North Korea is redundant activity; they isolate themselves. Chinese have been urging them to reform but Chinese doubt reform requires openness. And openness will expose North Koreans to ideas they fear, the regime fear. Therefore, they live in isolation. I am attracted to the ideas of the Kookmin University Professor Andrei Lanko in promoting exchanges which expose North Koreans to wider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Because I think that can only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the North Korea's fanciful propaganda and thereby undermine its authority and legitimacy over time. That's a very long-term opportunity or project. We have much more urgent problems.

■ Some have advanced the idea of redeploying US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I doubt the necessity or wisdom of this, but the subject is worthy of discussion. The key objective must be to sustain the credibility of deterrence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s appear reckless than before.

■ Many in Washington exhort the Chinese to impose restraint on their North Korean ally. This is a logical suggestion. But the Chinese spurn that idea. They worry more about North Korea's collapse than its nukes. They insist that the nuclear issue is a bilateral problem that should be handled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And they appear quite comfortable indulging the North Koreans with food and fuel, underwriting its survival of the regime, blessing its succession plans, and ignoring its provocations. I would not waste time on any public hectoring of the Chinese. It really doesn't do much good. But we ought to look for additional ways to make China pay politically for their public indifference toward the trigger-happy conduct of their ally. Meanwhile, we should concentrate on our defense and our deterrence capabilities, and clarifying what our "red lines" are and how we are going to react when they cross.

■ In this connection, I applaud the long-delayed joint naval exercises in the Yellow Sea. It's about time we got around to conducting those. We need to let the Chinese understand that if they are unprepared to provide adult supervision to the "young general" in Pyongyang, they had better get used to seeing our naval forces exercise with greater frequency in the yellow sea. Meanwhile it seems to me the appropriate time to focus on our readiness and revisit the rules of engagement to assure that an incident like those that have occurred recent months don't occur again.

I am not a military man. I have seated with a table of great military men. They will have better ideas on what specifically needs to be done at this moment. But I think the bottom line is obvious: if North Korea commits another provocation like the sinking of Cheonan-Ham or the shelling of South Korean territory, the risks associated with South Korean and or the US timidity or temporizing outweigh the dangers of escalation. After all, it is the North that has to worry about the survival of its regime.

## ■ Chinese Assertiveness

Let me turn to China. The rise of China has been transfixing observers around the world for a number of decades now, at least three. They have generally adhered to the cautious admonitions of Deng Xiaoping to bide their time, conceal their capabilities, concentrate on economic growth, pile up achievements, and maintain a low international profile. This is a version of the classic “weak state strategy” and it served China extremely well. It made eminently good sense at a time when the Chinese felt obliged to devote their primary energies to daunting domestic challenges. The question is whether China’s strategy has changed. Among the reasons for concern, you are absolutely familiar with the following developments.

- They stiffed your government on the Cheonan-Ham issue. They ran interference for Pyongyang in the UN. They have broadly defined that the South East Sea is the core interest of China, whatever that means. They attempted to define the entire Yellow Sea as part of China’s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reby putting it off limits for US naval operations.

- China’s military budget has steadily moved upward at a rate of nearly double-digit increases for two decades.

- It has accelerated the construction of a robust “blue water navy,” and is investing heavily in space and cyber capabilities.

- It has brandished menacing sanctions and bullying tactics in dealing with Japan over the incident near the Senkaku islands.

So, it’s fare to ask what accounts for these trends in Chinese policy? In my country, there are three explanations that circulate. They are by no means mutually exclusive.

- One hypothesis is that China no longer needs to pursue a “weak state strategy,” because it is no longer weak. The financial crisis and its aftermath may have been a “game changer” in this respect. The Chinese put together a very robust stimulate package which worked. It returned them nearly double-digit growth within a short period. And they may have concluded that their system of state capitalism was vindicated while the flaws and error in more market-oriented system were exposed. If that was their conclusion, they may have reinforced their conviction that the balance of forces in the world is shifting inexorably in their favor, and they can afford to flex their muscles in ways that we find increasingly discomfiting.

- A second hypothesis is that the People’s Liberation Army leadership is insular and provincial, it is prone to see the US and its allies as the main enemy, it is eager to establish control of adjacent maritime areas, and it is subject to less effective civilian control these days because the most senior party and state leaders no longer possess the military credentials of Deng Xiaoping, or even the authority that was gradually accumulated by Ziang Zemin.

- A third suggestion is that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has exposed the Chinese people to globalization and to information technologies which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expression and sharing

of strong nationalist sentiments, which the leadership must take into account in formulating and executing foreign policy.

As I say, these are not mutually exclusive explanations. I'm not a China expert. I suspect all have some influence on today's China. I don't know personally how the Chinese will use eventually utilize the power they are rapidly accumulating. But there are certain realities which no Chinese leadership can afford to ignore.

-- One is that its military budget remains but an eighth of our own, and we are not standing still. We can operate in their neighborhood, they can't operate in ours, and they won't be able to for many year.

-- For another, China's primary challenges remain internal; they are gigantic; and they require a single-minded focus, the prerequisite for that is peace on their borders. Then, I think it is a huge stake. And defining for Chinese policy now on will continue to be for at least a decade or two.

-- For still another, unlike the Soviet Union in its hey days, China is surrounded by consequential countries. Russia has the second largest nuclear arsenal. Japan has the second most sophisticated economy. Chinese know that Korea and Vietnam are not pushover or patsy. And Australia, Indonesia, and India are not far distant. The US forces are looming just over the horizon. When they are in the Yellow sea, they are just over the horizon. So when China encroaches on the interests of its neighbors, the alarm bells ring all over the region; indeed, the response recently to Chinese policies both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maritime issu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have produced a harbinger of what you would normally expect. The balance of power is operating. The Chinese know all about this. It has been a skilled practitioner of the balance of power politics for four thousand years.

## ■ Maritime Disputes

You know better than I that virtually all Northeast Asians - Russia is an exception - rely heavily on imported raw materials and energy resources for their survival and prosperity. Sub-sea deposits of both are up for grabs, and disputes over key island groups are intensifying. As China builds up its navy, it will be in a position to push its own claims more assertively. And it has no record of readily giving up sovereign claims. It has been prepared to "shelve" such disputes when they cannot be easily resolved. But that is because it expects its relative power to grow vis-à-vis other claimants. By putting such disputes on the shelf, it expects return to them when its leverage has increased. It also insists on dealing with such disputes bilaterally. It regards efforts to "multilateralize" such disputes as minimizing its own leverage, and thus playing into others' hands. Thus, they showed their hostile reaction to Secretary Clinton's statements at the ASEAN Regional Forum. I consider the outcome of the recent Sino-Japanese difficulties a mixed bag. Japan did not distinguish itself. It drew a line in the sand, then backed off. For this, the Kan government paid a price at home, and its conduct earned few kudos abroad.

On the other hand, China's rough, even ruthless pressure tactics prompted many Asians to wonder about the sincerity of its continued commitment to the doctrine of "peaceful rise." Beijing came off as

a bully determined to have its way. A drift toward strategic rivalry between Beijing and Tokyo is not inevitable, but on the margins its likelihood has increased. Certainly the Japanese government will be under pressure to adjust the trajectory of its defense budget and pursue closer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other Asian nations.

## ■ DPJ Foreign Policy

Let me say a bit more about the Japanese Democratic Party's foreign policy since it took office in August 2009. Tokyo has not exactly been on a roll. The Okinawan base issues have been returned to the back burner at least for a while. But they have not been resolved, and the outcome of local elections in Okinawa last Sunday will further compound the political challenges we both face. The foreign policy-making process in Tokyo remains erratic and unsettled. The professional diplomats have been side-lined; but Japan's elected politicians have not displayed particularly impressive diplomatic capabilities. DPJ leaders have attempted over the past year to reposition Japan between the US and China. Yet the DPJ lurched first in one direction, then another, leaving uncertainties about its policy priorities. The Senkaku incident did serve to inject a greater note of realism into foreign policy deliberations. And it has reminded the Japanese of the value of having reliable allies and friends.

## ■ President Obama's Next Two Years

Let me finally comment on the situation in America. President Obama's domestic power suffered a stiff body blow in the mid-term elections. I wouldn't say that the trip to Asia followed him very much good at home.

With the prospect of divided power in Washington, when a new Congress convenes in January, it is almost inevitable that the president will devote more of his time to foreign policy. It is an alarm at which at least our president has the illusion of greater control.

I think he is destined to regard Asia as a major preoccupation - as indeed it has been for the past two years. The recently articulated desire to add jobs through exports should reinforce this geographic priority, given East Asia's rapid growth and our sizable merchandise trade deficits here. So will our recent difficulties with China, the renewed military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and encouraging possibilities for stabilizing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lso focus Washington's attention on this part of the world.

To be sure, activ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strain US military resources and divert our attention to other regions. Our growing international indebtedness will impose fiscal constraints on our national security efforts in Asia and elsewhere. But this will also heighten our stake in cultivating strong and effective partnerships in the Asia/Pacific region.

Already,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demonstrated a more active interest in cooperative regional ventures in Asia. It has signed up for engagement in the East Asian Summit meetings. It has embraced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Project. It is seeking to inject new life into APEC. Hopefully, it will soon secure the conclusion on the ratification of FTA with Korea.

I believe the great unanswered question is how America chooses to regard China over the longer

term. Some Americans firmly view it as a potential threat; some – though fewer lately – as a promising global partner; some as a mainly ferocious commercial competitor. Perhaps it’s all three. But it’s something more. It is a big “wake-up” call for Americans.

I went to school in the 1950’s. I can remember the profound shock in waking up in the morning to discover the Soviet launch of Sputnik. Many experts at that time anticipated that the Soviet Union might supplant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premier industrial and military power. Fortuitously, the Soviet challenge prompted the United States to put its own house in order.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working with a Democratic Congress, passed the 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to bolster our universities. It passed the National Highways Act to expand our infrastructure. It dramatically increased our invest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ies like aerospace, computing, and telecommunications, whose mastery undergirded our industrial and military preeminence throughout the balance of the twentieth century.

Now the Chinese are knocking on our door, and they present a considerably formidable challenge, I think. They are neither the Soviet Union did in the 1960s or Japan did in the 1980s. Maybe we were a more optimistic people then. But I think the American people are now waking up to the fact in order to compete and to honor the obligations that we have accumulated over generations. We need to tackle these problems at home. We have permitted sub-standard schools for too long. We have accumulated unsustainable debts. We are wavering on immigration. And we are tolerating incredible levels of political dysfunction in Washington and many state capitals. I think there is a sense that these problems can no longer be kicked out on the road. But I wouldn’t worry that we will be so diverted by domestic problems that we can’t maintain and adjure. I will thank if you should encourage us to tackle these problems.

We are a competitive people. The Chinese present us competitive challenge. The problems this imposes us are not unfamiliar. They are not insurmountable. But the only question is whether we will muster the necessary unity of purpose and political will to tackle them. I sense in our own politics that will and purpose is there. And because power is divided, our politicians are compelled, I believe, genuinely impelled to tackle these more by partisan spirit than one has seen in Washington for some time.

If we can tackle these problems, the problem that we have with China will not take care of itself, but it will prove to be much more readily manageable. And if we get on top of these problems, I think, we will be a much more worthy and reliable ally for you over the long hole.

I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I will be glad to swing at your questions.

## ■ Questions and Answers

Q-1) I listened to your encouraging comments on solid alliance between our two countries. North Koreans and pro-North Korean dissidents in South Korea may believe that the US wont be able to provide further support to South Korea even if the military tension is escalated here because the US is already heavily engaged in Afghanistan and Middle East affairs. In the event North Korea escalates the situation from “provocation” to “aggression,” would the US government muster military

and political actions to prevent the escalation?

A-1) I think the US and the ROK are immeasurably stronger than North Korea and its Chinese ally. Your economy is fifty times the size of North Korea's, the increment in your defense budget, I believe, is nearly as big as annual defense budget in North Korea. The US, despite the conflicts in Afghanistan and Iraq from which we are withdrawing our troops since then, as capabilities in this region, they are fully adequate to control escalation. We simply can't be allowed to fall into a condition where we consider that there are no options between pinprick responses and general war. North Korea has to worry about escalation. As I said, the Chinese need peace and stability on their border. If they don't expect any response to North Korea's provocations, then they can remain comfortable in current position. But if they think the result, the Pyongyang's action could be more generalized conflict on their frontier it seems to me that would move them to action to control their friends. They are not paying their cost at present for indulging the provocative behavior, or aggressive behavior of their ally.

Q-2) I am Christian minister Kang Il-goo. Now our biggest problem is that we have too many Kim Jong-il followers in South Korea. To keep our peaceful country, we must stop the war. Since Kim Jong-il is prone to do anything for regime survival, we have to remove him from power.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threat, South Korea should also have nuclear capability and invite more attention from the US and China. The grim fact is that South Korea is within North Korea's missile or nuclear range. I'd like to hear your opinion about our contention to remove Kim Jong-il and to allow nuclear capability to South Korea.

A-2) We need a couple of days to answer all these good questions. They are perfectly good questions. At first place, if I understood properly, it is my impression that there was a division of opinion within South Korea about the culpability for the Cheonan-Ham sinking. But there has been a rather unified response in the elements of your population against North Korean shelling of your island killing civilians, even including those who might have been entertaining excuses for North Korean behavior. I've seen some of that reflected in what I guess you would describe as the leftist press in this country. So the reaction has been different style that gives you a stronger position for which to respond politically.

As a response to the general issu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what others and neighborhood should do, the reason why the US government worked so hard on nonproliferation is that the wider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becomes the more unstable strategic calculation on their own governments. We have proclaimed under new President that desired to get to zero nuclear weapon. I'm old enough to entertain the questions about the feasibility of that. But certainly it's not feasible. The question if we can stop North Korea and Iran which are currently seeking such weaponry gives us an issue priority. And the reason why I think our government is so focused on this issue is the fears that if North Korea establishes a recognized status as nuclear power and Iran does the same thing, it will have widespread ramifications in both regions. After all you, Taiwan and Japan have far more financial capability and far greater technology than North Korea and there is nothing to stop them technologically or financially, not only emulating other nuclear programs but far exceeding their capabilities.

And in the Middle East, if Iran gets the nuclear capability, we worry about the rapid spread to Egypt, Saudi Arabia, or even to Turkey. It's not to single out the dangers associated with any of those particular countries, but it's just the consequence of a broad strategic break out and quick expansion in the number of nuclear powers and what that does to all of our strategic calculation that we are worrying about and gives us particular urgency. And it's the reason why we will resist and adjust what is North Korea's main strategic objective here, namely recognition of their nuclear status, a negotiation with the US on arms control from a basis of equality and to continue the ability to exclude, effort to exclude, South Korea from those discussion, which is by the way a sign of great disrespect, particularly in view of the fact that you negotiated the agreement on these issues with North Korea in 1991, which they blighted and ignored, and regularly violated.

So, I don't know if I got the answer to the very relevant question, but I would underline and response the urgency of dealing with this on the basis of joint effort that includes your government, our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extent we can eventually persuade China, and Russia seems more cooperative recently than before to do it together. The only chance we got is to present North Korea what the united front between the US and its own neighbors means. We haven't been successful in that regard over the last decade or so and it is so important now for us to become united and resolute.

Q-3) I am Kim Yong-un, Marine Corps Reserve Major General. I believe Sou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capability is a controversial issue. It seems that our joint naval exercise in the Yellow Sea until yesterday has irritated China and now China may turn to constrain North Korea to behave. Similarly, if South Korea and Japan become nuclear states to withstand North Korean nuclear capability, I believe China would become more involved in stopping North Korean outrages. Even during the Six-Part Talks in the past seven years North Korea continued to develop nuclear capability and its degree of provocations has been escalated. I believe that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we had nuclear capability. It may have some armistice constraint, but I believe that the CFC or UNC should have launched active response when this island was bombed. There is no doubt that our military leaders fumbled the situation, but my question is if the UNC could do anything under this situation.

A-3) I think reflecting back on last week, it seems to me there was a question of readiness and there was a question of rules of engagement. I don't believe that it was a matter of lack of capability but I think it is appropriate at this juncture to look carefully to review if there are deficiencies in our military capabilities. If we have, then we have to repair them. But I think mainly this is a question of the readiness of troops on the island. They should have shown response to evident warnings which have come before but nothing happened. It is not understandable. Not to say lack of judgment, but here in this case, I understand there were warnings eight hours in advance, but often when you get these warnings and nothing happens, they are not taking perhaps serious action as it is one of those as in the past.

And the rules of engagement were a design primarily to avoid escalation, rather than principles of action. This is not a problem so much in overall capability, it's a problem of taking North Korea's reckless behaviors into account and addressing rules of engagement and readiness issues. As President Lee's public declaration North Korea will have to pay a serious price if that happens again and we are

in a position to make sure how we are going to respond. Once you make these commitments but if you don't follow through, it's a big blow. So I welcome the very clear statement of President. We are short of notice, you're unnoticed as we are, but if this happens again you've got to follow through with the stern response.

I think also the US case, here I speak personally, I don't represent anybody, but I think we have to be clear about the red lines. It is very clear and the most serious thing from the US standpoint would be North Korea's use of their nascent nuclear capability or to make an aspect of that capability available to terrorist groups around the world. And their desperate economic conditions may encourage them to sell things to anybody who has cash. So that's a realistic worry on our part. We haven't, I think, been quite as clear about our red lines as we should be. And I think there is perhaps understandable reluctance to specify red lines with clarity. If we introduce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North Korea will try to justify their possession or to find excuses to defy South Korean possession. But I think if you have a genuine and vital national interest, you will be willing to tell North Korea clearly what price they will pay if they cross the line. So if we have a problem in that broad sense, you also have a problem near the Northern Limit line against North Korea's reckless behaviors. So we have to be clear about our red lines and we have to be ready to do something when those lines are crossed. I trust that the North Koreans will be more cautious next time because your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and you have a big stake in assuring there is a follow through. And we have a big stake in fortifying your ability and your willingness to do so.

Q-4) I am Yoo Seok-ryul, Professor Emeritus of th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I hear many scholars say these days that cataclysm or collapse is imminent in North Korea. I am worrying that China may meddle in should North Korea collapse because it already has been exercising influence there. There is a good sign that China is in favor of Korean unification under South Korean control as Wikileaks revealed, but China's cliquism may be a snag for our national unification. Here, my question is what is our stake to do and what the US government can do for us.

A-4) I think the US would welcome unification of Korea. We have been in the middle of fractured side of conflict for half a century. We clearly assume that given enormous success that you have, the greater power that you have accumulated, the democratic governance that you express, and the greater appeal of your system and your values, the unification will be achieved in South Korean term. That's been our assumption all along. We assumed that it's really for South Korea to figure out the modalities and the nuances and to have strategies. It's after all your country. And our job, we have felt for half a century that our job is to hold a ring to contribute to deterrence to prevent the North from seeking again as it did in the 1950s to unify the country by the force. On the supposition that if it's undertaking in a free fashion your values and your system will prevail. So I don't think we have devoted a lot of time and attentions to strategizing about unification. We've thought to be helpful assuring your security while you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proceed unification. I think that's appropriate division of our labor on this issue.

Q-5) First, are you more optimistic about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Second, Is your China policy is moving from a kind of strategic partnership to a bit checking or containing China, with the support from Japan, Korea, Australia, maybe ASEAN, and India? Is it a kind of loose defense line?

Are you changing your foreign policy that way or is it temporary?

A-5) I personally feel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beneficial to both of us, and to everybody else. We have ample reasons for striving for such a relationship. We provide China with market as the last resort. Unfortunately we became heavily dependent upon China to finance our trade merchandize debts. So we have a big stake in managing our economic interdependence in a thoughtful and prudent way. Although we don't say openly, we also hedge our know how that China will eventually use for accumulating its power. We know its relative position is improving very rapidly. And this causes some concern among Americans. So it's natural for us to try on one hand to cultivate cooperation with China where it serves mutual benefit and to hedge by keeping a position in the region, some military bases and forces, to protect our own interests and to protect our friends. That's by the way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and most everybody else. It's not really a containment strategy. It's a matter of keeping our options open. Now there are Americans who over the last a year or two have thought of China as a preferred partner. And they talked even G2. Even Brzezinski with whom I once work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 among those promoting the side of G2. I can see a lot of reasons for the US to cooperate closely with China. But I just don't see any G2 on the horizon. Why? For one thing, the Chinese are mainly preoccupied with its own affairs, domestic matters. They are not prepared to hitch their power to a large sense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When previous G20 meeting took place, the only issue on which Chinese got energetic was to keep Hong Kong off the list of tax haven to be investigated, not a very broad international agenda. At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or the Doha Trade Negotiations, they've mainly played defense, leaving to others the responsibility to figure out how to follow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duce the emissions in the atmosphere or liberalize the trade. None of this was particularly surprising. It's certainly not reprehensible but it suggests that China is not prepared to tackle those larger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and its attitude does not deserve any respect.

We have other partners that are more valuable, including Korea. Because you are willing to step up to these larger issues as are many Europeans and Japan. And if we give our priority to China, we offend our long time partners. So not America is necessarily eager to share superpower status with China yet either, but it seems to me the conditions for that kind of tide, global partnership to deal with transnational issues, are out there. So I wouldn't regard China as the partner to respect yet. As for containment as I say we are keeping our options open and hedging our bets. But I don't think we are trying to design a long term containment policy at this point. However, I think the reactions of Asian countries to China's recent conduct have been very salutary. I noticed China's conduct and diplomacy as it has been stimulated others to consider their coalition to respond. And that's healthy thing for them to think about.

Q-6) I am Kim Chang-ki from the CS News Press. I think we are witnessing nowadays that the UN can practically do nothing about such straightforward open provocation by North Korea as the sinking of our warship Cheonan, the Uranium Enrichment Program, and recent reckless bombardment on South Korean island. So my first question is "How seriously do you think the UN is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in its global governance, especially on security matters?" The second question is "Even if the UN Security Council is not resolute enough for international security affairs, do you still think the P5 veto power should be preserved or revoked in the next stage of the UN reforms?"

A-6) There was a moment at the end of the Cold War whether or not the Security Council has the potential to function as an effective body. And the moment seemed to have passed. I think the Security Council is not a representative body any longer. The G20 is trying to find a pattern of global governance and has greater representation for the countries whose relative power has grown; China, India, yourself, Brazil, Indonesia, and others. In the G20, what one sees is that Asian representation is going up. Its focus is mainly on macroeconomics of course, so it doesn't really address the security problems directly. But as I said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issue, the prerequisite for effective diplomacy is to establish the united front that embraces China, Russia,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So some are permanent members and some are not. But they are the countries with a great stake in the Korean issue. Therefore, so long as China is a kind of odd member on this issue, we are going to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And we have to vest China with more responsibility because it is the one who embraces North Korea, to keep the regime in reasonable shape, at least providing necessities including fuels, and to frustrate the provocative actions. But the chances for united action have diminished. So we hope to bring China back to play more responsible roles, but it's a matter a bit unrelated directly to the UN.

We've looked at the UN structure reforms with two thoughts in mind. One was the need to be more representative. On the other hand, we didn't wish to see the Security Council itself becomes so broad because it would be ineffectual. So it's striking at balance which we've never been able to strike because you can never get the votes, especially to alter the Charter, and yet to keep the body to a number that has some promise of being effective. I don't believe the Security Council has been particularly effective, and recently I don't believe the likelihood of the structured reform was very high. I might say personally that I would favor getting those structural reforms. When Ambassador Kong and I served in Japan, this was a major obj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we put our shoulders to that wheel but to find a formula which would preserve the effectiveness while increasing its representation was beyond reach. So I wouldn't bet the mortgage on my house on coming up for the solution very quickly.

Q-7) I am Ha Tae-kyeong, Director of the Open Broadcast to North Korea. My questions are ab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fter North Korea revealed their Uranium Enrichment Program, it seems more and more evident that North Korea is not willing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They have plutonium weapons and uranium weapons. They want to be recognized by the US as an official nuclear state like India. First, whether or not the US would recognize North Korea as an official nuclear state in the future. Second, if the US doesn't want to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what could be done to let them give up their ambition. Third, how soon, in this case, can we make them give up or how long would it take?

A-7) Well, at first, I don't believe they have uranium enriched weapons. They're building a commercial facility that they claim as a peaceful use. Their claim is skeptical but happily it's not a large scale in this program. I think they reaffirmed their determination to enter this field. I share the skepticism that it's not going to be an easy or a quick process of persuading them to give up the capability which they now have. But it would be rather easier to freeze a nuclear ambition while it's in the process and when they haven't gotten it yet. Then it is to rollback something, I believe. And this now requires our rollback.

If you ask what the incentives are, it's hard to find them. They have treated the acquisition of nuclear capabilities as a political bonanza for the regime. In many ways it's about the only thing this regime has accomplished in sixty years. It is doubtless to believe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leaders who enjoy extraordinary influence on their government will regard this as more efficient deterrent than conventional one, even though they had perfectly adequate deterrent and their capability to ring out artillery fire on the national capital of South Korea. Third, I'm sure they look upon it as an equalizer. They have observed South Korea surpassing the North in every dimension of national power for decades. And in this situation they believe perhaps they've got something, but it is not trumping South Korea, at least as an equalizer of a sort. Of course in the past they found this was very reliable bargaining chip which they could continually use to get repayment and repayment for promising the same thing. So given this array of benefits they perceive, i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I think, to persuade them. This will not happen quickly without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It is a question whether it could happen without the unity I describe between Korea's neighbors and the US, and so as is problematic we've got some work to do there.

But I believe it's important to continue pursuing that for the reason I earlier described. To recognize their status as a nuclear power is in a way to give up on the idea of arresting what could be a very rapid proliferation around the world, but particularly North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And it will be, from an American standpoint, the more countries that possess these capabilities the greater the risk that they can be leakage to non-state groups who are difficult to deter. Because they are not only killing in the name of religion, they are ready to die in the name of religion. So the deterrence is very difficult not quite the same as we would normally deal with territorial state. This is the problem whose difficulty can't deter us from persevering. We must keep after.

I don't think you will see the US government recognizing or accepting North Korea's nuclear status. We will keep working at this, I think, the only way to do it, this is why I think, perhaps requires a different regime in North Korea by making it clear that they benefit the state with secure and fruitful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Japan, the US. And I believe that would be more beneficial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although there is a small group currently perceives and pursuing a nuclear option. So the concept that we've had in our minds was the correct one. We haven't mobilized the requisite diplomatic capacity to persuade and embrace this, but we got to keep going.